

일반
논문

민주시민교육 내용 규정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원석** _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옹진환 _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정하윤 _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정원규*** _서울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점증하고 있으며, 다양각색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연구는 우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관리자, 운영자,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최종 결과물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제공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성화 요소(홍보 수단 및 안정적 교육 공간 확보 등)를 찾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주제(개인적 주제, 사회적 주제)와 초점(의제, 관계, 활동)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따라 전문성 확보, 공동의 산출 결과, 운영진 기획력 등과 같은 활성화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또한 각기 다른 민주시민교육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 역시 강조하였다(정책적 반응성).

■ **주요어:** 민주시민교육, 문화기술지, 유형화, 정치적 중립성, 정책적 반응성

1. 서론

그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시민교육은 반공 교육의 기치 아래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려는 신민 교육(臣民教育)의 일환으로 기획, 운영되었으며, 학교는 이러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적극 활용되었다(알튀세르 2007). 반면에 진보적인 교사를 포함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비판과 참여에 바탕

을 둔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꾀하고 있는 최근에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분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정하윤 2015).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안착되고 일상적 삶에까지 그 가치나 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요컨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형해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공고화’ 혹은 ‘실질화’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민족·인종·성별·세대 간 갈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보다 최근인 2019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선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에 내리찍는 햇볕이고 단비”가 될 민주시민교육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도 하였다(뉴시스 2019/06/10). 이 밖에도 서울시를 포함하여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신설 혹은 개정하거나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조철민 외 2019).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적으로 이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물론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의 방향성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적절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반민주적 교육이나 주관 단체의 이익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성의 없는 내용으로 형식적 교육만 반복하면서 주관 단체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 교육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마저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과제, 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주체들이 수많은 유형의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매중물로서 우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관리자, 진행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그들의 실제 생각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의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4장).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이들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는 다시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는 무관한 공통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를 추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추출한 것이다. 본론에서 다시 상술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활성화 요소 또한 달라짐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반응성)을 제시하였다(5장).

2. 선행 연구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만큼이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나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은주(2017)는 ‘민주적인 판단 능력’, ‘행동 능력’, ‘방법론적 활용 능력’을 두루 갖춘 시민 형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소하게 정의된 능력에 기반한 지배, 즉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해 온 한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민주적인 상호 인정 관계’의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확대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허영식(2020, 162)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를 한편으로 다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포용적인 공동체로 강조하는 사회 혹은 국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와 방향을 언급한다. 특히 이러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 참여,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된다(허영식 2020, 166). 또 다른 예로 조철민(2017)은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교육도 환경교육, 인권교육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일상적 삶의 순간들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과 민주주의의 관점과 양식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즉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조철민 2017, 44).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의 이론적, 규범적, 역사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일부들을 연구자의 시선에서 제각각 강조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통의 이해 혹은 공통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과 효과를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권진욱 외 2016; 김미향 2017; 신수연 2008; 주은경 2014; 채진원 외 2015; 허영식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단체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개별적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검토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장(field)’ 속에서 어떤 목적 아래,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연구와 주제적으로 거리가 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전체 현황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의 부재 속에서 다음 세 가지 목적 아래 시행된 서울시립대학교(2018)의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과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을 학습 유형, 교육 장소, 교육 대

상, 교육 분야, 참여자 수 등의 유형별로 나누어 전체 현황 파악.
 둘째, 서울시 거주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셋째,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나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이나 초점 집
 단 인터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그러나 이 연구는 이미 규격화된 범주를 활용한 양적 현황 분석에 중점을
 둬으로써 민주시민교육 참여 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의 지점들이
 나 실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전반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
 구의 부재는 이 연구가 시작된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였다.

3. 연구 방법

이미 주어진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적 연구 방법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유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의
 된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틀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다. 이미 주어진 이론적 배경이나 분석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민
 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선결하지 않는 연구 방법, 즉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문화기술지는 통상적으로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보다는 그 사회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종규 2006, 178). 또, 이러한 탐구를 위해 문화기술지에서는 “집단의 정신적 활동의 패턴(또는 의식,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 혹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묘사되는 것)”을 찾고자 한다(크레스웰 2015, 119). 이러한 문화기술지는 일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분석틀로서의 유형을 발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화기술지는 문화적 패턴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닌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론이어서 통상적으로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의 패턴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 따른 성공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심층 면담과 FGI 기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연구 대상자 선정의 과정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해 온 단체들 가운데 두 개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질문지를 새로 구성하고 수정하는 이 단계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단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두 단체는 평화, 통일, 인권, 정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민주적 삶 혹은 민주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이라

〈그림 1〉 연구 대상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 9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 9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 11명

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들을 강의, 워크숍, 소모임 등 다양한 배움의 형태 속에 수년째 다루어온 단체들이었다. 예비조사 이후에는 연구가설이나 연구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패턴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이 특별히 고려한 것은 면담 대상자의 개별적 특수성이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지역사회 발전, 갈등 관리, 자원봉사, 민주적 관계 형성, 공론장 통한 현안 이해 및 정책 마련 등 여러 민주시민교육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9개 단체가 섭외되었고 이 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면담에 응해주었다.

연구 대상자 가운데 관리자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민주시민교육 관련 경험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두 차례의 FGI를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었는데 첫 번째 FGI에서는 심층 면담을 위한 설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역할을, 두 번째 FGI에서는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수

〈그림 2〉 자료 수집 단계



립에 대한 검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문화기술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래들리(Spradley 1980)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참여 관찰이 아니라 개별 면담 시간이 2시간가량 되는 심층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가 상대적으로 분명했으므로 불필요한 사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자료 조사 단계로 들어가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 수집 절차는 〈그림 2〉에 제시된 스프래들리의 세 가지 자료 수집 단계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추출하여 예비 조사 단계에 적용하였다.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서술적 관찰’이 이루어지는 단계이지만, 이를 토대로 집중 관찰을 위한 질의 문항을 개발해야 하므로, 작성된 문항에 국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관찰’을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심층 면담을 수행했다. 심층 면담에 사용한 설문 문항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질문 영역(예: 왜 이 단체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나요?, 이 단체의 다른 프로그램 혹은 다른 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방식, 특징 등에 대한 질문 영역(예: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무엇인가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프로그램 ‘진행자-참여자 관계’에 대한 질문 영역(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많은지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문 영역(예: 프로그램을 진행/참여하면서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혹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기타’ 질문 영역(예: 시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시민교육이 특별히 다루어야 할 주제나 염두에 둔 교육방식이 있는지요?)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설문 문항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참여한 FGI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의 범주적 의견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소를 추출했고, 나아가 영역 분석에 대체로 성공했다고 판단했지만, 영역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활성화 요인이 구별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이미 개발된 문항 외의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고, 이후 면담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선별적 질의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별적 조사에 따른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FGI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 역시 스프래들리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80)는 영역 분석, 분류 분석, 구성 요소 분석, 문화 주제 분석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는 연구 주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부분은 영역 분석 및 분류 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활성화 요소 추출 부분은 영역 분석, 분류 분석, 구성 요소 분석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각각 이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 외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도 연구 설계 및 연구 실행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면담 대상자가 면담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적 변화를 겪을 위험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면담 대상자는 언제든지 어떤 불이익도 없이 면담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지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의서를 교환하여 재차 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자료 또한 연구자들 외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관하고 있다. 다만,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3년, 개인 정보가 삭제된 자료는 5년 동안 연구 책임자가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이다.

4.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공화 민주주의’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이념에 기반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한다면, 이념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적용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령 교육 내용만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의 문제부터 사회/국가적 문제 모두를 포괄한다. 나아가 그것은 주제 상으로도 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된 절차, 요건, 정책, 문화, 태도 등을 포괄한다. 요컨대 다루어지는 주제 자체의 특성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혼란은 면담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면담 대상자들은 ‘평등, 권력 분산, 다양성 존중, 합의, 소외되지 않은 것, 소통, 과정,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소통, 조율, 살기 좋은 세상’ 등으로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답변 중에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때로는 서로 갈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양한 민주적 가치가 경합하는 ‘논쟁적’ 상황을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에 포함시켜 면담 참여자들이 어떤 민주적 가치나 요소들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나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질문들 속에는 자율, 책임, 인권, (준)법 등과 같은 가치와 요소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면담 대상자들의 강조점은 예상대로 상당히 엇갈렸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담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는 처음에는 깨울 것 같아요. 깨우고요. 그 다음에 깨운 친구의 의사가 계속 자기를 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터치를 안 할 것 같아요. (K 프로그램 진행자)

아이를 깨우지 않는 선생님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역으로 드는 거죠. (C 프로그램 참여자)

저는 자도록 내버려 두자는 편이에요. ... 개인의 삶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자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다른 사람은 그냥 ‘자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자기 수업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서. (H 프로그램 진행자)

이러한 혼란은 ‘시민’의 개념을 두고도 이어졌다. 시민의 개념과 관련 하여 연구진이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은 누가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법체류자¹⁾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F 프로그램 진행자)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F 프로그램 참여자)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 ...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커다란 일 중에 하나는 국가가 나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과 누구를 나의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를 법으로 정하는 것 ...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보통 자국의 시민을 누구를 규정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민이다, 여기서부터는 시민이 아니다. ... 그게 사실은 국가가 성립해야 하는 요소잖아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 불법체류자를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그래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 (J 프로그램 진행자)

1) 면담 진행 중 한 면담 대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미등록 체류자’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구진의 경우 설문지 제작 전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이미 인터뷰가 상당수 진행되었기에 여기에는 실제 사용된 설문지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연구진 역시 그 의미와 취지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하지만 이렇듯 엇갈리는 대답들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인간 존엄성, 인간다움 등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F 프로그램 진행자)

가족 관계, 마을 공동체, 민주적 소통 등의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하는 배려나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F 프로그램 참여자)

시민은 사실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배려와 예절, 그런 것들을 겸비한, 겸비하기 위한 게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준하느냐가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놓고 주입하는 식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등을 보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시민교육은 ...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 내용도 그렇고. (C 프로그램 참여자)

그런데 이렇듯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반공 교육’이나 ‘꽃꽂이 교육’과 같은 것도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시민에 대한 물음에서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러한 견해차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면담 대상자는 반공 교육은 민주 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제가 생각하는 반공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게 맞다. 특정한 게 옳다’라고 교육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광화문 한복관에서 ‘나는 빨갱이가 좋아요’라고 외치든 ‘나는 어떠한 어떠한 당이 좋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지 그거를 교육하고 뭐가 맞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교육을 한다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시민이 판단할 문제고, 사회가 판단할 문제지. (J 프로그램 참여자)

반면에 다른 면담 대상자는 안보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공이라는 것도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누가 보면 맞는 거고 논쟁의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반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흘러 왔고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논쟁의 지점이 있고. 반대편에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를 ... 그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저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 프로그램 참여자)

요컨대 교육 주관 단체, 또는 교육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교육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주제로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참여자에게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한다면 이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꽃꽂이 교육의 경우에도, 꽃꽂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담 대상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다만 꽃꽂이 교육을 소재로 해서 사회적 지향을 갖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명시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라도 그러한 지향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꽃꽂이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취미활동을 ... 꽃꽂이 활동이나 이런 것이 본인의 취향을 더 세련되게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의 덕성을 뭐라고 봐야 하고 그것에 교육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취향 공동체를 위한 교육 제공이라면 그게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F 프로그램 참여자)

예를 들어서 저의 자원봉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꽃꽂이 강사나 꽃꽂이를 배운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에 같이 가서 그 분들의 원예치료 차원에서 같이 이거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 우리끼리만 좋은 것 배우고 여기

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도와준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설계가 되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는데 ... (I 프로그램 진행자)

꽃꽂이로 모였지만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 근데 우리끼리만 할 거야. 우리끼리만 필요한 꽃을 사가지고 오래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꽃꽂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G 프로그램 진행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면담 대상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교육 주관 단체나 진행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수강생들에게 강요하거나 그와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을 비난하는 등 교육 참여자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 지향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과 민주주의 및 시민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견해는 <그림 3>과 같다.²⁾

2) FGI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처럼 형식적, 절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평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진으로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 우선 하나는 실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에 대한 동의를

〈그림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규정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는 내용(목적)만이 아니라 방법(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존 듀이(Dewey)가 강조하였듯이 민주주의는 어떤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 자체이기도 하다(듀이 2007). 민주시민교육 역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나 역량 획득이라는 결과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과정 역시 민주적일 때 온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선 면담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듯이 꽃꽂이와 같은 개인적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지향을 갖는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적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 활동 마냥 사회적 지향을 갖지 않는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규정에 생활 정치와 사회적 지향 요소를 포함한 이유이다. 이러한 규정은 바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민주주의가 절차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함축하는 한에서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형식적, 절차적 규정은 민주시민교육 내용 정의의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사회적 지향’이나 ‘교육 활동의 절차적 민주성’ 등이 실질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슨한 정의는 아니라는 점을 부연해 두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여섯 가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유형별 활성화 요소

연구 초기에 연구진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주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프로그램의 주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진행자/참여자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심층 면담을 수행한 결과, 예상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정도는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른 활성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활성화 요소

먼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무관하게 추출된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활성화 요소들을 살펴보자. 전술한 것처럼 연구진들은 무엇보다 프로그램 주제나 진행 방식이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런데 주제 자체나 진행 방식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제나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했

다가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에 연구진으로서는 그런 사람 자체를 접하기 어려웠다. 그렇더라도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제나 진행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유형 및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으므로 유형 분류에 대한 추후의 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주제 자체가 지루한 프로그램은 인기가 없다. ... 참여자들이 제목과 주제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제와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B 프로그램 진행자)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 물론 통일에 관해서 북한 전문가가 오시면 우리가 압전히 앉아서 듣기는 해야겠지만, 보통은 같이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 (선생님께서서는 그러한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합니다. (K 프로그램 참여자)

반면에 홍보나 운영 공간 등의 외적 요소는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지만, 진행 단체가 적절한 공간이나 홍보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담 내용이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렇지 못한 진행자는 그로 인해 모임을 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공간 문제가,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오는 데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위치라든가 ... 대관료가 없는 것만 해도. ... 저는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엄마들 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나 뭔가 아이들하고 활동을 계획해서 하고 하는데, 공동체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연간 쓰거든요. 근데 그걸로 대관료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H 프로그램 참여자)

계속 임대료가 높아져서 올해 말 되면 여기 접으실 거예요. OO에도 협동조합 마을 카페가 있는데 어려워요.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공간 유지비를 어떻게든 벌어나기 위해서 막 물속의 백조 발처럼 계속 노력을 해야 하죠. (F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 사람 모집하는 거 되게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몇 번 관계 맺었던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측면이 있죠. (K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및 진행자/참여자 관계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했지만,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자/참여자 관계 역시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프

로그래밍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에 비공식적인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더 조사될 필요가 있겠지만, 참여자들이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본인들의 개인적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어떤 진행자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공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에 너무 쏠리지 않게 한다거나. 또 이제 쓸 데 없는 소리에 대해 끊지 않는 경우,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실 예의바르다는 게, 반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술선수범한다거나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 기본적인 에티튜드가 배어 있는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해요. 참가자들이.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좋았다. 진행하시는 분 잘한다. 그리고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겹도는 얘기가 있고 자기 얘기를 잘 끄집어내서 본인 사례를 되게 ... 사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억울한 사례가 사람들이 공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이끌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E 프로그램 진행자)

어떤 강연자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하게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그 활동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어떤 분에게는 별도로 따로 좀 만나고 싶다 해서 그 분이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

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돼서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전했어요. (C 프로그램 참여자)

마지막으로 면담 대상자였던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결과로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그 효과가 반드시 가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친분 관계를 형성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 참여 정도 및 참여 의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추후 다른 방식을 통해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이해 관심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학생들 참석자들이 높은 아카데미는 뭔가 공식 수료증을 주는 곳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경우도 높은 곳이었던 것이고, 저도 그런 곳에 참석했었어요. ... 공신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입사지원서에 쓸 수 있는 뭔가 나눠주는 곳. ... 사실 그 때 당시에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뭔가는 쓸모가 없고, 쓸모 있는 것을 주는 곳에서는 내용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 [퍼실(퍼실리테이터, 촉진자_연구자 주)로 활동했던 경험이 개인의 이력에 도움이 된 게 있었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 취업준비를 하다 보면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토론동아리 같은 것 하긴 했었지만, 이 경험이 입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

는 것 같아요. (E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중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 다르신 것 같아요. 저거 주실 때는 구청장님 오시고 의전하고 꽃다발 주시고 자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뭔가 인정받는 느낌, 어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느낌 가지시는 것 같아요. ... 요즘 애들은 상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어르신들, 저희 어렸을 때는 상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 와서 많이 받으니까 행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G 프로그램 진행자)

2) 민주시민교육의 유형별 활성화 요소

한편, 인터뷰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면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진행 방식을 선호하거나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연구진들은 주관 단체 및 프로그램의 주제와 초점을 두 축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에 특징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요소를 연결시켰다.

그런데 FGI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 분류 기준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

〈표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주제 초점	사회적	개인적
의제	유형 1 - 전문성 확보 예) 참여연대 '행동하는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학교' ¹⁾	유형 2 -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예) 참여연대 '기타 교실' ²⁾
관계	유형 3 - 민주적 지도자 확보 예)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여성사 강사 양성' 및 '마실 정기답사' 등 ³⁾	유형 4 - 공동의 산출 결과 예) 성북구청 '찾아가는 골목회의' ⁴⁾
활동	유형 5 - 운영진 기획력 예)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걸 ⁵⁾	유형 6 -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예) 극단 작은곰 '우리 동네에서 연극을 만나다' ⁶⁾

- 주: 1)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ecture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민주주의&document_srl=25094 (2019/12/16)
- 2)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 (2019/11/19)
- 3) https://cafe.naver.com/motherpower?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12196402%26page=1%26menuid=40%26boardtype=L%26articleid=2534%26referrerAllArticles=false (2019/12/16)
- 4) http://www.sb.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0316_main&nttlId=9459153&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0100&fourthMenuNo= (2019/12/16)
- 5) <https://kdeside.tistory.com/1> (2019/12/16)
- 6) <https://www.facebook.com/20161129jagunkom/photos/rpp.124423624781512/549706072253263/?type=3&theater> (2019/12/16)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었다. 이러한 비평은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특성을 찾고자 한 것이지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내용과 형태를 모두 분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예시가 되지 않아서 유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면담에 응한 단체나 대상자를 밝히는 것은 익명 처리를 전제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각 유형의 사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단체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표 1〉). 즉, 이들 사례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먼저 가로축을 이루는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사회적 주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주제들 역시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령 참여연대 아카데미에는 ‘자기재생을 위한 춤 워크숍’, ‘기타교실 맞춤형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중에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를 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형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술한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거나, 활동가들의 모임이라는 점,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연구진은 일단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를 사회적, 개인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이 달라지는지, 또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이론적, 실천적으로는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춤 워크숍이나 기타 교실 등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

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임 등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모임을 개인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 자원봉사 ‘모임의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와 시민성을 연계지어 가지고, 자원봉사가 시민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공공성, 자발성, 호혜성, 무보수성 관련해서 자원봉사 기본 원칙이거든요. 기본 원칙과 시민성과 연계지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역량 강화가 되는 것이죠. (I 프로그램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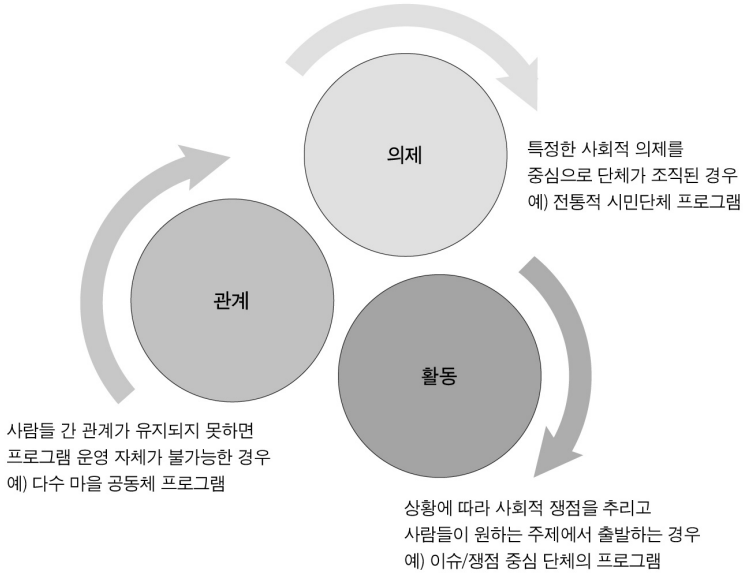
이러한 범례를 토대로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면, ‘사회적 주제’란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이거나, 단위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주제를 의미하며, ‘개인적 주제’란 그 내용이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에게만 관련된 주제를 말한다. 그런데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이러한 분류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 외에 한 가지 더 혼동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자칫하면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고, 개인적 주제를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으로, 예를 들어 반공 교육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지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맥락에 따라서는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교육도 얼마든지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요컨대 여기에서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시민교육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한 기준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주관 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무슨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체로 사회적 '의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그러한 단체들이 특정한 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결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마을공동체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의제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거기에서는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의제를 다루더라도 특정한 의제에 꾸준히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쟁점을 추려내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또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의제나 관계보다 '활동'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경우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유형을 분류하

〈그림 4〉 민주시민교육의 분류 기준: 초점



였고, 면담 자료를 토대로 그에 따른 활성화 요인을 추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여섯 가지 유형과 활성화 요인이 단순히 직관에 근거하여 추출된 것은 아니고, 롤스(Rawls)식 성찰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을 활용했다. 즉,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의 특성이 면담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상호 비교하며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유형을 변경하여 변경된 유형을 자료와 일치시키거나 하면, 유형을 중심으로 이미 제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유형과 자료의 일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에 특징적인 활성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

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표 7>과 같다.

<표 2> 유형 1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1	사회적 주제 / 의제 중점
특성	구체적인 민주적 결과를 성취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므로, 유능하며 활동 가능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활성화 요인	전문성 확보 ▶ 참여자들 중에 예비 활동가들이 많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 정말 이 사람은 전문가다. 전문성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 꼭꼭 씹어 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듯이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쉽게 전달해 주니까 ... (K 프로그램 진행자) •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의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 이 교육을 추천해 줘가지고 ... 일단 프로그램이 좋았었던데요. ... 기초 이론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안을 쓴다거나 ...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 필요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다 받고 ... (B 프로그램 참여자)

<표 3> 유형 2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 2	개인적 주제 / 의제 중점
특성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결과 성취에 대한 지향은 뚜렷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며, 또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진행자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활성화 요인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 전문가들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므로, 전문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지향점이나 그러한 활동 자체의 의미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뒤처다꺼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선까지 정책에 참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들을. (I 프로그램 진행자) • 공공성, 자발성, 호혜성, 무보수성 관련해서 자원봉사 기본 원칙이거든요. 기본 원칙과

	시민성과 연계지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I 프로그램 참여자)
--	---

〈표 4〉 유형 3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 3	사회적 주제 / 관계 중점
특성	민주적 지향과 무관하게 지역민이나 학부모라는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초기에는 민주적 지향에 이르게 하는 데에 필요한 민주적 의지와 리더십을 지닌 사람에 의해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된다.
활성화 요인	민주적 지도자 확보 ▶ 일반적으로 이러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많지 않으므로 일정 단계를 지나면 지도자의 소진으로 인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열었다. 작년에는 활동가들만 왔지만, 올해는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공론장 활성화와 더불어 촉진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H 프로그램 진행자) • 그렇게 변화를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런 민주시민적 함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렇다고 하면 그걸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겠구나. 그런 촉진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지면은 좋겠다. (D 프로그램 진행자)

〈표 5〉 유형 4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 4	개인적 주제 / 관계 중점
특성	유형 3과 상황을 공유하지만, 아직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게 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활성화 요인	공동의 산출 결과 ▶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의 산출 결과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공유하는 방식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신 분들도 다 보면 여기는 아파트, 국토교통부랑 같이 아파트 분쟁을 주로 다루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면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슈가 있어요. 빈려건 문제, 흡연,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거든요.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분쟁의 당사자이신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G 프로그램 진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활동가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했고 ... 같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대화한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참여했을 때는 운영진이 있었고 그 운영진들이 커리큘럼을 만드셨어요. ... 1기가 처음에는 8회를 약속하고 했었는데 15회나 했었거든요. ... 그 다음에 2기를 모집할 때는 ... 어떤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 그렇게 1기 2기 참여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 3기 때부터는 ... 다양하게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어떤 분에게는 별도로 따로 좀 만나고 싶더라고 해서 그 분이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운영해보는 것에 ...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C 프로그램 참여자)
--	---

〈표 6〉 유형 5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 5	사회적 주제 / 활동 중심
특성	넓게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민주적 지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쟁점 토론이나 공정 선거 운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주적 근본 원칙, 문화 등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활성화 요인	<p>운영진 기획력</p> <p>▶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므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의제, 활동 방식 등이 중요하다.</p>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로 ... 가장 많이 집중됐던 것은 공론장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 토론하고 숙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알려내는 것 ..., 두 번째, ... 가장 목소리가 작은 세대 2030대에 집중해서 해보자 해서 ...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 혁신과 미래 담론이 필요하다 해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p>(다른 진행자) 그 분은 설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설계를 쟁점을 세울 것이냐 합의를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낼 것이냐. 몇 가지 틀을 저희가 작년부터 잡고 하거든요. ... 저희는 온라인, 핸드폰으로 당일 투표를 많이 하게 하거든요. ...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 그걸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 발제자도 그거에 맞게 섭외에 많이 신경을 써요. (E 프로그램 진행자)</p>

〈표 7〉 유형 6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 6	개인적 주제 / 활동 중점
특성	민주시민교육보다는 관련 주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성화 요인	<p>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p> <p>▶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셈이므로,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일차적 관건이 된다. 그러한 요소가 충족된다면 유형 2, 4 등과 유사한 관정을 뚫게 될 것이다.</p>
인터뷰 내용	<p>• 모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많이 좌우 하더라고요. 일단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문 앞에서부터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거든요. 뭐 차나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에 이름표를 배치한다든가 오기 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통 인권감수성 교육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것에 굉장히 섬세하게 발달을 한 분이어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대화나 서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거칠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점서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에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내용 이상의 신뢰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리더가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리더를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관심을 거야 하고 이래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F 프로그램 참여자)</p>

3) 정책적 함의

민주시민교육 공통의 그리고 유형별 활성화 요소에 대한 앞선 분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낸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형의 다양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실행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

거지기 십상이다. 이는 특히 한국 시민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편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선 자신들의 대중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마다 다종다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령 선거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에서도 유권자 교육이나 통일교육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왔다. 또, ‘관변단체’들에 의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입장에 따라서는 정부나 관변단체에 의한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자체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극단적인 이념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이나 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으로 중립성 논란은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³⁾ 따라서 당장의 정책 지원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자체를 최대한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를 만들어 보다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포용한다는 원칙 아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사회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전제되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정책적 반응성(policy responsiveness)이다. 정책적 반응성은 민주시민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 주체의 사정에 따라 요청되는 서로 다른 필요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 예시되었던 것처럼 가령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홍보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간이나 홍보수단과 관련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공간이나 홍보수단의 확보가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이다. 인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곳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을 요청하고, 어떤 곳에서는 강사나 강사비 지원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구슬된 것은 아니지만 활동가의 소진으로 인하여 아예 함께 활동할 사람을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된 지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곳

-
- 3) 2019년 말 이른바 ‘인혼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러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 현안 교육원칙 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9). 비슷한 시기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진보와 보수의 시민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참여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포식을 가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남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요구들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예를 들어 중간지원조직이나 자율적인연합기구)들 역시 보다 유연하게 그러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서로의 정보와 필요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6. 결론

1) 연구 요약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 규정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 발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관리자, 진행자,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FGI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 속에서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관되고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나 내용에 상관없이 교육 주관 단체나 진행자가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다른 입장을 지닌 사

람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꽃꽂이 교육이나 안보교육 역시 그것을 소재로 삼아 민주적인 지향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 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적절한 홍보 수단, 참여자 간의 활발한 관계맺음, 안정적 운영 공간 확보, 개인적 이해관심의 충족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우선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주제’(사회적 주제, 개인적 주제)와 교육 ‘초점’(의제, 관계, 활동)에 따라 6가지 유형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였다 (표 2~표 7 참고).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구축, 민주적 지향과 의제 공유의 기회 마련, 사람들 간의 관계를 민주적인 지향 아래 조직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 확보, 공동의 노력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의 경험, 민주적 절차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운영진과 이러한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활성화 요인이라는 것을 추출하였다.

2) 연구 한계 및 후속연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또 민주시민교육이 마주한 어려움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와 실천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시도하였고 또 활성화 요소들을 추출해 보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활성화 요소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이 기획하거나 혹은 진행 중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가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9개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우리 연구의 활용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양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수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의 연구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이나 이른바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단체들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는 분명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연구를 활용할 때는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적·물적 자원과 기회가 대단히 집중된 서울과 서울 외의 지역은 민주시민교육의 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자,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나 진행자의 경우 사회적 목적에 대한 관심이,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이득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 마냥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부합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참여 주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또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필~~

참고문헌

- 권진욱 외. 2016.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 김미향. 2017. “한국 YMCA 사회교육실천가의 전문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평생학습사회』 13(2), 1-20.
- 듀이 존. 2007.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경기: 교육과학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 2019/11/18.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첫걸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선포식 합의문.”
- 서울시 교육청. 2019/12/17.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 합의안.”

- 서울시립대학교. 2018.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연구용역보고서』.
- 신수연. 2008. “민주시민교육 사례보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3-115.
- 알튀세르, 루이. 2007.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역. 서울: 동문선.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장은주. 2017. “‘형성적 기획’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초점.” 『한국학논집』 67호. 7-36.
- 정하운. 2015.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역사와 제도화 과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문. 91-109.
- 조철민. 2017.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문』. 34-47.
- 조철민 외. 2019.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 주은경. 2014. “모든 시민은 교사, 예술가, 정치가다.” 『시민과 세계』 24. 192-211.
- 채진원 외. 2015.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5(1). 69-103.
- 크레스웰, 존.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 허영식. 201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태연구』 18(1). 45-64.
- _____. 2020. “포용국가 형성을 위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4). 160-189.

Spradley, James.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뉴시스. 2019/06/10. “[전문] 문재인 대통령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사.”

Abstract

A Study on the Scop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Ways to Promote Related Programs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Operators and
Participa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Programs in Seoul

Kim, Won-seok_Seoul Educational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Ong, Jin-hwan_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Fellow

Jeong, Ha-yoon_Ewha Womans University, Ph.D.

Jeong, Won-gyu_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re has been a recent surge of interest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DCE) in Korea. However, amid a lack of a broader social consensus on DCE, there are increasing confusion and debate over the scope and contents of DCE, which have been deterring the efforts to provide support to diverse DCE activ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DCE is understood by those who organize, run, and participate in DCE program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loys ethnographic method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at provide insight into what is actually happening in reality.

As expected, a variety of perspectives were expressed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s of democracy and democratic citizen as well as what DCE should entail. Notably, the interviewees commonl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rocedure or democratic teaching rather than DCE topics themselv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efined DCE as “education that addresses topics on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everyday politics, and socially-oriented public activities, assuming that the educational activity meets

the requirements of procedural democracy.”

Then, the ways to promote DCE were explored largely in two dimensions: factors which can be applied to all DCE programs (PR strategies, securing educational spaces, etc.) and factors which can be applied to specific types of DCE. For the latter, DCE programs were divid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their topics (social or personal) and foci (agenda, relationship, and activities), and the securing of expertise, the engagement in common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and the planning capacity of DCE program staff were derived as elements for promoting DCE.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e paper underlines the need for a more inclusive policy support based on political neutrality and higher policy responsiveness to the diverse demands for DCE in order for DCE to develop further.

■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thnography, Typology, Political Neutrality, Policy Responsiveness

투고: 2020/03/31 심사: 2020/04/21 확정: 2020/05/14